

# 육아정책 소식

## 모든 아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학교안전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에는 2020년까지 총 6,632편의 작품이 응모되어 학교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그동안 실시했던 포스터,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 안전지도 만들기 부문 이외에도 교직원의 안전교육활동 우수사례 부문을 추가하여, 실제 학교현장에서 실시된 안전 교육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스터,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 안전지도 만들기, 안전교육활동 분야에 총 726편이 접수되었다. 안전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 2차 심사를 거쳐 학교급, 부문별로 입상작 101편(대상 16편, 최우수상 31편, 우수상 54편)을 선정하였다. 포스터 부문(고등학교) 대상에 화재경보기에 대한 안전불감증 의식을 액자 형태로 표현한 창원대산고 박지원 학생의 '장식이 아닙니다.' 작품이 선정되었다.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 부문(초등학교) 대상에는 학교안전사고를 올림픽 중계 형식으로 표현한 벽방초 '2021 안전어린이 올림픽 안전 3종' 작품이 선정되었다. 안전지도 부문(중학교)에는 학교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진장중 '학교안전 Remodeling'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안전교육활동 부문 대상(중학교)에는 학교주변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담은 신평중 조혜경 교사의 '우리 모두 살펴요! 신평 안전!' 작품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평생학습박람회 전시\*하고, 수상학교의 활동 상황과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며, 학교안전정보센터 누리집(www.schoolsafe.kr)에 게재하였다.

##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 확산 -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12개 신규지구 선정 발표 -

교육부는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12개 지역을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력 성장

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2년에는 기존 21개 지구와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하여 총 33개 지구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특별교부금 1억 원씩을 지원하고, 매년 연차 평가를 거쳐 재지정된 지구에는 최대 3년까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온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삶의 터전인 자신의 마을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체험학습, 자유학년제 등과도 연계·운영해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미래교육지구에서는 ‘우리동네 교육회의’(서울 구로), ‘청주형 마을교육자치회’(충북 청주), ‘우리봄내 동동’(강원 춘천) 등 지역 내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성화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중앙 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케이(K)-에듀파인’에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충남·경남교육청에서 12월 6일(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케이(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 및 각 급학교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며,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가 0%의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시도교육청에서 법인카드 없이도 ‘제로페이 앱(NH모바일G)’을 사용해 일상경비(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방식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정보 처리를 위해 ‘케이(K)-에듀파인’에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스템(2010년 EFT, 2018년 e교육금고전자지출서비스)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제로페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도입·확대하게 되었다.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도입에 따라 시도교육청 사용자는 법인카드 수령·반납, 영수증 제출과 같은 일상 업무의 경감 효과가 있으며,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2월 3일(금)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NH농협은행,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제로페이 도입·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하였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2020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6).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하여 보호대상아동 등이 자립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시행규칙 제19조).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시행규칙 별표 3).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화)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서울),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에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대구, 경남 권역에 2개소를, 소아 인구 수가 많은 서울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을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10월 23일(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을 주제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식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서 2004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제 18회를 맞는 행사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총회는 개최식에 이어서 온라인(비대면)으로 3회(10월 23일, 24일, 30일)에 걸친 토의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의 행사는 국내 50개의 아동친화도시의 아동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아동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최식 현장에는 아동대표 의장단(5명),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철모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전국 아동대표(110여 명)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개최식 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대회에서 선출된 전국 아동대표들이 3일간 온라인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총 2개의 핵심주제(발달권, 보호권)에 대해 조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 후 10월 30일(토) 폐회식에서 온라인 총회의결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였다.

##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5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였으며, 이어서 유공자 포상, 긍정 양육 공감 토크, 긍정 양육 129원칙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관련 시민단체 등 행사 참여자 모두가 '긍정 양육 129원칙'을 선포하였다.

긍정 양육 129원칙		
긍정 양육의 기본 전제 1		
긍정 양육의 기본 원리 2		
1.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 양육의 실천 방법 9		
① 자녀 알기	② 나 돌아보기	③ 관점 바꾸기
④ 같이 성장하기	⑤ 온전히 집중하기	⑥ 경청하고 공감하기
⑦ 일관성 유지하기	⑧ 실수 인정하기	⑨ 함께 키우기

이 원칙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기본 전제(1가지)와 긍정 양육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2가지의 기본원리 및 9가지의 실천방법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착안하여 '긍정 양육 129원칙'으로 명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담은 각종 홍보물(탁상달력, 포스터 등) 뿐만 아니라, 긍정 양육 129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방법이 담긴 '긍정 양육 129' 책자 및 안내 영상도 전문가들과 함께 제작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분	내용		
첫만남 이용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지급</li> <li>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li> <li>사용기간: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li> <li>신청 및 시행: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li> </ul>		
영아수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음.</li> <li>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li> <li>※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됨.</li> </ul>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p>		
		2014.2.1. ~ 2015.3.31. 출생아동	2015.4.1. 이후 출생아동
	개정 전	2021.1월 ~ 2022.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개정 후	2022.4월에 2022.1.~3월분(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지급 *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9일(목)에 공포·시행하였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포함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대상에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 “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여성가족부는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강가정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게 되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가족친화인증제 인증기준 개선 추진 후 내년부터 적용

여성가족부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열고,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4,918개를 확정했다. 올 상반기에는 기업이나 그 대표의 가족친화경영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지도력(리더십) 평가항목에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했고 이를 인증 부여 또는 취소 여부 심의 시 반영하였다. 2022년에는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여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직원 수가 적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자가 없을 경우 평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차활용률',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과 같은 지표로 대체해 해당 기업·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을 실제에 가깝게 평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시(22.4월) 신청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이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하고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교육·자문활동(컨설팅),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